

근·현대 지역사료 수집, DB 구축 및 공동 활용

- 국가기록원, 국사편찬위원회, 한국학중앙연구원을 중심으로 -

The Acquisition, Construction and Common Use of Modern and Post-modern Document DB in the NAK, NIKH, and AKS

강 순 애 (Soon-Ae Kang)*

목 차

- | | |
|-------------------------|-----------------------------------|
| 1. 서 론 | 4. 근·현대 지역사료의 DB 구축 및 활용 |
| 2. 한국 지역사 개념의 범주와 특성 | 4.1 국가기록원의 중앙기록관리시스템 및 나라 기록포털시스템 |
| 3. 근·현대 지역사료의 수집 및 대표기관 | 4.2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데이터베이스시스템 |
| 3.1 국가기록원 | 4.3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향토문화대전시스템 |
| 3.2 국사편찬위원회 | 5. 근·현대 지역사료의 공동 활용을 위한 협력과제 |
| 3.3 한국학중앙연구원 | 6. 결 론 |

<초 록>

본 연구는 근·현대 지역사료 수집, DB 구축 및 공동 활용 방안의 네 가지 측면을 다루었다. 첫째, 한국 지역사의 개념은 향토사, 지방사, 지역사 등으로 쓰이는데 근·현대사와 관련해서는 지역사의 개념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둘째, 국가기록원은 1999년에 제정된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근·현대 지역사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대학, 기타 공공기관의 기록물을 관리하고 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2004년부터 2010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각 지역에 산재해 있는 근·현대 지역사료를 시군별 자료수집과 더불어 주제별 자료조사도 병행하고 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은 초기에는 현대사연구소를 중심으로 근·현대사 사료를 수집하였다. 1997년부터 2005년까지는 수집된 사료는 해방기를 전후한 자료들이다. 셋째, 국가기록원의 중앙기록관리시스템 및 나라기록포털시스템,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데이터베이스시스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향토문화대전시스템의 특성이 기술되었다. 넷째, 세 기관 사이의 공동협의회의 구성은 국가기록물관리위원회 산하에 '근·현대 지역사료 협의회'를 두고, 국가기록원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각 기관과 연대해 나가며, 근·현대 사료의 디지털화된 자료의 공유를 위한 기술개발, 콘텐츠의 이용과 개선, 공공의 이용과 참여, 국제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려면 국가기록원, 국사편찬위원회, 한국학중앙연구원의 분담된 역할이 있어야함을 강조하였다.

주제어: 근·현대 지역사료, 국가기록원의 중앙기록관리시스템 및 나라기록포털시스템,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데이터베이스시스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향토문화대전시스템

<ABSTRACT>

This paper deals with the four aspects of the acquisition, construction and common use of modern and post-modern document DB in the NAK, NIKH, and AKS. First, The concept of Korean regional history includes provincial history, local history and regional history and as far as modern and post-modern history is concerned, the concept of regional history is on expansion. Second, National Archives of Korea has been systematically collecting and managing modern and post-modern regional history records in compliance to Public Institutes Records Management Law, enacted in 1999 and currently is in charge of handling public records of 373 central government administration offices, 514 regional government offices, Office of Education, universities and of other public agencies.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is working on a ten year project from 2004 to collect the scattered modern and post-modern regional history records and to classify them regionally and thematically.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has been collecting modern and post-modern regional history records and collection was initiated by Modern History Research. Those records that are collected from 1997 and 2005 are mainly from the liberation period. Third, characteristics of Central Archives Management System and Nara Records Portal System of NAK, Korean History Database System of NIKH and of The AKS' Korean Provincial Culture Electronic Encyclopedia are elaborated. Fourth, establishing 'Modern and Post-modern Regional History Records Council' as an affiliated organization of National Archives Management Committee is recommended, NAK leading the council and promoting further cooperation. In this section, an emphasis on allotted tasks of three institutes in order to achieve technology development for digitalized resource sharing, to improve on contents and to promote public and international use is placed as well.

Keywords: modern and post-modern regional history records, Central Archives Management System and Nara Records Portal System of NAK, Korean History Database System of NIKH, Korean Provincial Culture Electronic Encyclopedia of AKS.

* 한성대학교 지식정보학부 교수(h4085@hansung.ac.kr)

■ 접수일자 2008년 11월 4일 ■ 수정일자 2008년 11월 29일 ■ 게재확정일자 2008년 12월 22일

1. 서론

근·현대 지역사료의 정리 및 자료수집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90년대이다. 1990년대 한국사연구에 미친 서양역사이론의 영향으로 인해 시대별로 체계화된 지역사 연구가 지역민을 주체로 하는 문화사, 종합사, 생활사의 영역으로 확대되었고, 이에 따라 지역사 사료의 정리는 고대, 고려, 조선, 근대, 현대의 각 시기별로 서술체계시안과 활용자료를 제시하고 그 자료를 정리하는데 주력하였다(강순애 2006).

그중에서도 근·현대에는 지수걸 교수가 다시 3개의 시기로 나누었는데 개화·한말시기, 일제강점시기, 해방 8년 시기로 나누었다. 각 시기별로 상위주제를 정치, 경제, 사회, 문화로 나누고, 하위주제들은 시기에 따라 다르게 제시하였다. 이들 시기의 주제를 다루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는 공기록물, 사기록물, 구전 및 인터뷰자료, 유물·유적자료, 사진·영상자료의 5개 영역으로 제시하였다(지수걸 2001). 이러한 흐름은 중고등학교의 제5차, 6차, 7차 교육프로그램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이러한 바탕위에서 근·현대 지역사료의 수집도 본격화되었다. 국가단위의 사료수집 기관으로는 국가기록원, 국사편찬위원회,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있고, 이외에 대학의 부설연구소와 시·군단위의 문화원, 향토사연구회가 있으며, 개인 단위로는 연구자 혹은 향토사학자를 들 수 있다.

이중에서 근·현대 지역사료의 수집, DB 구축 및 활용은 국가기록원, 국사편찬위원회,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중심이 되었다. 국가기록원은 1999년에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근·현대 지역사 사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였는데 시·도 지방행정기관 및 시·도 교육청에서 이관 받은 일반문서류가 370만여 건이 되며 이는 중앙행정기관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다. 국사편찬위원회는 1860년부터 1970년대 사이를 근·현대시기로 정하고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개년 계획을 세워 자료수집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으며 2007년부터는 지역별 조사와 주제별 수집을 겸해서 하고 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은 1997년에 현대사연구소를 설립하고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하여 2005년까지 해방기를 전후한 교민사, 독도관련, 이주, 위안부, 민주화관련, 식민지배정책, 동학농민 등의 여러 주제의 사료를 수집하였다.

근·현대 지역사료의 DB 구축 및 활용은 국가기록원이 중앙기록관리시스템 및 나라기록포털시스템을, 국사편찬위원회가 한국사데이터베이스시스템을, 한국학중앙연구원이 한국향토문화대전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세기관이 근·현대 지역사료의 공동 활용을 위한 협력에 대한 논의는 아직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필자는 근·현대 지역사료의 수집, DB구축 및 공동 활용을 다루기 위해 한국 지역의 개념의 범주와 특성, 근·현대 지역사료의 수집 및 대표기관, 근·현대 지역사료의 DB 구축 및 활용, 근·현대 지역사료의 공동 활용을 위한 협력과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의 결과는 한국의 근·현대 지역사료의 수집 및 활용, 추후 DB구축 및 협력과제를 다루는데 필요한 기초 데이터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2. 한국 지역사 개념의 범주와 특성

한국 지역사의 개념은 鄕土史, 地方史, 地域史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영미권에서는 향토사를 'provincial history', 지역사를 'regional history', 지방사를 'local history' 등으로 사용된다. 일본에서는 향토사, 지방사, 지역사 등의 용어로 발전되면서 쓰였다(강순애 2006, 8).

鄕土史는 일정지역의 토착성, 지방성, 고유성, 국지성을 나타내는 말이며 동시에 자신의 출신지역에 대한 향토애를 내포하고 있다. 향토사의 주제는 연구주제나 연구대상이 향토성과 관련을 갖고 있어서 주관적이고 애향심에 빠져서 객관성이 결여되는 측면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향토사와 관련하여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향토교육이다. 향토교육이란 향토 및 생활 공동체에 대한 애착과 이해를 중시하는 교육으로 추상적인 국가나 세계의 시점에서 떠나 향토사회를 중심하여 교재를 구하고 거기에서 출발하여 교육목적이나 방법, 내용을 구체화하려는 교육상의 주장으로 독일의 교육사조에서 출발하였다고 이해되고 있다(김현영 2000, 329).

地方史는 지역사와 유사한 개념이지만 중앙에 종속된 개념이다. 중앙과 지방은 간을 수직으로 나눈 개념이고 중앙에 종속적인, 주변적인 함축을 지닌 용어이다. 따라서 지방사는 국가사의 상대개념으로 사용되는 역사이다. 따라서 지방사 연구는 해당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기틀을 제공하고 아울러 해당 지방문화의 바른 모습을 밝혀 지역개발의 밑거름이 될 것을 주장한다(고석규 1998, 13-40).

地域史는 수평적인 공간개념으로서 국가사와는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지역의 역사를 다루

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최근 역사학계에서는 향촌사회사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이는 역사의 한분야로서의 사회사(social history) 더 나아가 전체사(total history)로서의 사회사(history of society)에서 주로 지방을 단위로 한 사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향촌사회사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김현영 2000, 329-330).

최근에 이 세 용어들 중에서는 근·현대사와 관련해서는 지역사의 개념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우선 지방자치제도의 실시로 지역의 향토사학자와 전문연구자들이 공동으로 지역사 연구를 추진하게 되었고, 1990년대 중반이후 2000년대로 들어서면서 사회정치적 환경의 변화에 의해 근·현대사의 연구주제가 운동사에서 사회사로 바뀌고 있으며, 근·현대사의 전공자들의 전문그룹 형성과 학술진흥재단 및 대학의 지원으로 연구의 주제가 일상사, 도시사, 여성사, 민중사 등에 관심의 영역이 넓어진 점 등을 들고 있다. 연구현황도 전체사로서의 지역사, 지역화된 전국사, 사례연구로서의 지역사로 확장되고 있는 추세이다.(양정필 2007, 12-29).

본 연구에서는 근·현대사 지역사료의 수집, DB 구축 및 활용, 기관간의 협력과제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는 연구이므로, 근·현대사의 연구영역에 확장되고 있는 지역사의 개념을 사용하고자 한다.

3. 근·현대 지역사료의 수집 및 대표기관

지역사료는 공공기록을 포함하여 역사기록

을 포함한다. 역사기록에는 고문서와 근·현대 기록이 모두 포함된다. 공공기록은 지방기록물 관리기관이 설립되어 지방별로 수집 관리되어 체계화되면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역사기록은 개인소장과 각 시설의 단체들이 가지고 있는 기록으로 각 지방공동체의 역사를 나타내는 기록물이라고 할 수 있다(최희진 2005, 9-13).

지역의 공공기록을 수집하여 관리하는 기관은 관할 공공기관의 보존기록을 관리하는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다. 이는 광역자치단체인 시·도에 설치하는 시·도기록물관리기관과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군에 설치하는 시·군·구 기록물관리기관, 광역단체의 교육청에 설치하는 시·도교육청관리기관 등으로 구분된다. 이는 2006년 기록물관리법 개정시 시도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한국기록관리학회 2008, 391). 현재 한국에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 설립된 예는 없으며 지방의 공공기록물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이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는 매우 긴급한 사안에 해당한다.

지역의 역사기록을 수집하는 기관과 개인은 국사편찬위원회, 한국학중앙연구원(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지방의 국·공·사립박물관, 지방의 국·공·사립대학 박물관, 지방문화원, 지방사편찬위원회, 지방사학회, 민간기념관 등이 포함되며, 개인에는 향토사학자, 해당 지방사에 관심을 갖고 있는 연구자, 개인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 등이 해당된다(김미향 2004, 12). 이 중 대표적인 역사기록물 수집기관은 국사편

찬위원회와 한국학중앙연구원이다.

이 장에서는 지역사료를 수집하는 많은 기관 중 공공기록물을 수집하는 국가기록원과 역사기록물을 수집하는 국사편찬위원회와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근·현대사 자료수집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3.1 국가기록원

국가기록원의 근·현대 지역사의 자료수집은 1999년에 제정된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공공기관이 소장하고 있는 근·현대 지역사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관리하고 있다. 현재 국가기록원은 373개의 중앙행정기관 기록물군 3,217개의 계열정보를 포함하여 문서 1,080,000여권과 기록물 550,000여점, 간행물 277,000여권, 총독부문서 30,700여권, 해외기록물문서 370,000여매, MF 3,774롤, 지도 419매외, 도면 526,300여매, 고문서(날장과 책형) 591매와 116책에 대한 기록물군과 컬렉션 기술서로 이루어져 있다. 지역사료는 514개의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대학, 기타공공기관 기록물군에 대한 8,454개의 계열정보를 포함하여 문서 297,562권, 카드 229,142권, 도면 484권, 시청각기록물 9,501권에 대한 기록물군 기술서로 이루어져 있다(국가기록원 2008).

이렇게 수집된 기록물중 근·현대 기록물의 유형은 일반문서류, 시청각류, 간행물류, 행정박물류, 마이크로필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을 유형별로 다시 세분하고 각 자료의 시대별 보유량을 표로 작성하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국가기록원의 유형별·시대별자료보유현황

시대별보유량 및 내용구분		보유량	주요내용	총 계	
일반문서류 (권, 매, 건)	문서(권)	조선시대	1,193	조선왕조실록, 구황실실문서, 기타	
		일제시대	405,00	조선총독부문서 등	
		정부수립후	1,516,480	각 기관 영구보존소 이관기록물	
		소계	1,558,173		1,558,173
	도면(매)	조선시대	6,936	기상관측도 등	
		일제시대	941,138	지적원도, 국유림경계도, 삼각원도 등	
		정부수립후	290,316	광구도, 전자설계도, 각종공사설계도	
		소계	1,238,390		1,238,390
	카드(매)	조선시대			
		일제시대			
		정부수립후	5,290,303	인사기록, 병적카드, 공무원연금카드 등	
		소계	5,290,303		5,290,303
	대통령 재가문건 (건)	소계	220,467	역대대통령재가문서	220,467
	일반문서류 총계	8,307,333		8,307,333	
시청각류 (집)	시청각	비디오류	37,643	대한뉴스 및 기록영화, 대통령해의순방등	
		오디오류	9,632	03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개·폐회식, 대통령신년사, 기자회견 등	
		사진류	1,733,632	윤보선 대통령청년시절, 역대 3부요인 및 역대장관인물 등	
		소계	1,780,907		1,780,907
	행정 박물	도안류	11,750	04서울세계박물관대회기념, 기념우표, 엽서, 화보, 팸플릿등	
		행정박물류	11,585	관인, 메달, 뺏지, 문장, 시계, 현판 등	
		스크랩류	337	대통령집무일지, 국회의원수첩, 방명록 등	
		그림류	98	그림(모사도)	
	소계	23,770		23,770	
		시청각류총 계	1,804,677		1,804,677
간행물류 (권)	행정 간행물	소계	306,613	기관별 수집간행물	
	일반 도서류	소계	74,428	일반출판사 발행도서	
		간행물류총 계	381,041		381,041
마이크로 필름(롤)	해외 기록물	소계	23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중국, 일본에서 수집한 한국관련기록물	23
		마이크로필 름 총계	23		23
		전체총계			12,273,981

자료: <http://www.archives.go.kr> / 기록물 검색 / 기록물보유현황(2008년 1월 기준).

〈표 1〉을 종합하면, 일반문서류는 문서, 도면, 카드, 대통령재가문건으로 세분된다. 문서는 전체 1,558,173권 중 조선시대 조선왕조실록, 구황실문서, 기타 1,193권, 일제 강점기 조선총독부 문서 405,00권, 정부수립 후 각 기관에서 이관 받은 기록물이 1,516,480권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도면은 총 1,238,390매인데, 조선시대 6,936매, 일제 강점기는 지적원도, 국유림경계도, 삼각원도 등 941,138매, 정부수립 후는 광구도, 전자설계도, 각종공사설계도 등 290,316매이며, 일제 강점기 기록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카드류는 정부수립후의 인사기록, 병적카드, 공무원연금카드 등 5,290,303매가 있다. 대통령재가문건 220,467건은 역대대통령재

가문서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시청각류는 시청각자료와 행정박물류로 나누어지는데, 시청각자료는 비디오류, 오디오류, 사진류로 세분되고, 행정박물류는 도안, 행정박물, 스크랩, 그림류로 세분되는데 대통령 관련자료와 국가 주요 행사 관련 자료로 되어 있다. 간행물류는 관별 수집간행물과 일반출판사 발행도서가 있으며 마이크로필름은 미국, 영국 등 해외에서 수집한 한국관련기록물로 많은 분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국가기록원이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 유형별 보유현황에 제시되고 있는 일반문서류 중 생산기관 이관기록물의 통계를 참조하여 〈표 2〉로 작성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국가기록원 소장 생산기관별 일반문서류 현황

기관별	문서(권)	도면(매)	카드(매)	총 계
중앙행정기관소계	1,129,176	417,537	1,618,595	3,225,408
시·도(시군구포함)소계	309,493	31,325	3,233,846	3,574,664
서울특별시	8,120	4,552	40,163	52,835
부산광역시	6,901	0	26,697	33,598
대구광역시	10,089	0	0	10,089
인천광역시	7,460	782	26,101	34,343
광주광역시	9,547	782	0	10,329
대전광역시	3,446	0	557,679	561,125
울산광역시	306	0	10,524	10,830
경기도	58,495	22,060	16,984	97,549
강원도	11,239	2,272	629	14,140
충청북도	11,963	0	1,300	13,263
충청남도	26,540	1,167	242,108	269,815
전라북도	20,003	159	88	20,250
전라남도	34,200	101	2,653	36,954
경상북도	26,019	93	4,253	30,365
경상남도	71,103	24	2,304,667	2,375,794
제주도	3,062	90	0	3,152
시·도교육청소계	61,945	0	99,732	161,677

기관별	문서(권)	도면(매)	카드(매)	총 계
서울특별시교육청	17,220	0	0	17,220
부산광역시교육청	2,317	0	976	3,293
대구광역시교육청	741	0	0	741
인천광역시교육청	1,143	0	0	1,143
광주광역시교육청	1,031	0	0	1,031
대전광역시	1,037	0	0	1,037
울산광역시교육청	387	0	0	387
경기도교육청	5,893	0	1,074	6,967
강원도교육청	3,281	0	87	3,368
충청북도교육청	2,737	0	0	2,737
충청남도교육청	5,747	0	0	5,747
전라북도교육청	5,900	0	13,301	19,201
전라남도교육청	6,267	0	78	6,345
경상북도교육청	3,957	0	214	4,171
경상남도교육청	3,592	0	84,002	87,594
제주도교육청	695	0	0	695
기타기관소계	48,453	789,528	338,130	1,176,111
총계	1,549,067	1,238,390	5,290,303	8,077,760

자료: <<http://www.archives.go.kr>> / 기록물검색 / 기록물유형별보유현황
 생산기관 이관기록물 (2008년 1월 기준)을 참조하여 편집함.

〈표 2〉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기록원이 소장하고 있는 일반문서류 중 중앙행정기관이 문서와 도면의 양은 많지만, 카드는 지방행정기관과 지방교육청이 중앙행정기관에 비해 양이 훨씬 많다. 시·도교육청은 도면자료를 소장하고 있지 않다.

둘째, 카드는 지방행정기관과 지방교육청이 중앙행정기관에 비해 양이 훨씬 많은데, 이는 경상남도, 대전광역시,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이관된 것이 많은 것으로 제시되어 있다. 그중에서도 경상남도가 2,304,667매로 가장 많은데 이는 한 도가 가지고 있는 것이 중앙행정기관 전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많다. 국가기록원이 2008년에 발간한 『국가기록물 소장기록물 가이드 II』를 참조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경상남도 카드 22권(조립사업카드), 거제시 9,142권(토지대장), 거창군 10,760권(임야대장), 고성군 10,917권(공유지연명부(토지)), 김해시 10,041권(조립사업카드 및 토지대장), 남해시 2권(인사관리카드), 마산시 9,395권(건축물관리대장, 인사관리카드, 공유지연명부(토지)), 사천군 8,872권(토지대장), 산청군 311권(인가매장), 양산시 6,689권(공유지연명부(토지)), 진주시 17,530권(문화유적관리계열, 아동복지시설관리계열, 위토관리계열, 인사관리계열, 인감대장, 토지대장 등), 진해시 3,093권(토지대장), 창원시 9,936권(공유지연명부(토지)), 하동군 9,480권(농지개혁상환대장, 공유재산대장, 집합건물대지권), 합천군 14,785권(공유지연명부(토지)) 등으로 총 120,975권(1

권당 30매 기준 $120,975 \times 30 = 3,629,250$: 유형별보유현황 2,304,667매)이다. 이들 자료는 근·현대의 경제사 연구에 매우 중요한 기록군에 해당한다. 대전광역시 소유하고 있는 카드는 대덕구 2,329권(산림개발의 영림계획인가), 동구 3,491권(임야대장), 서구 2,730권(임야대장), 유성구 3,296권(인감대장, 임야(폐쇄)대장), 중구 2,653권(공유지연명부) 등 총 14,499권(1권당 30매 기준 $120,975 \times 30 = 434,970$ 매; 유형별보유현황 557,679매)으로 역시 근·현대 경제사연구에 중요한 기록군이다. 경상남도교육청은 양산교육청만이 69권(인사기록카드)(1권당 30매 기준 $69 \times 30 = 2,070$ 매; 유형별보유현황 84,002매)을 이관했는데 이는 경상북도교육청이 이관한 303권(1권당 30매 기준 $303 \times 30 = 9,090$ 매; 유형별보유현황 214매)보다 훨씬 적어서 기록물유형별보유현황에 제시된 것이 통계상의 오류인 듯하다.

3.2 국사편찬위원회

국사편찬위원회는 1946년 3월 국사관 설치규정이 제정·공포되어 경복궁 집경당에 처음 설치되었다. 1949년에 문교부 직속 국사편찬위원회로 개편되었고, 1987년 '사료의 수집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한국사 사료수집·편찬기관으로서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현재는 한국사 종합 연구편찬기관으로서 사료의 수집·편찬·연구뿐만 아니라 한국사의 정보화 세계화 및 통일 한국의 민족사 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국사편찬위원회 2005). 2007년 12월 4일 법률 제 8674호로 전부 개정되고, 2008년 2월 27일 제 8852로 일부 개정된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내외 사료의 조사·수집·보존과 한국사 연구·편찬·연수·보급 이외에 사료관리전문인력 양성, 한국사 및 사료기관간의 조정, 한국사 정보화, 중요사료 보존·관리·편찬 등이 강화되었다.

국편은 국내사료 수집·조사·정리를 위해 지방사료조사위원회 487명, 기관사료조사위원회 167명을 운영하고 있다. 수집자료는 분석·정리·등록 후 인터넷으로 공개하거나 자료집을 간행하고 있다. 자료수집은 원본자료를 그대로 수집하는 경우도 있으나 주로 원본을 빌려 마이크로필름이나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정리하여 공개하는데 그중 사료적 가치가 높은 자료를 선별하여 『韓國史料叢書』 등의 자료집으로 간행하였다.

근·현대사료의 본격적인 수집은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각 지역에 산재해 있는 근·현대기록물을 수집하고 있다. 수집의 목적은 각 지역에 산재한 역사자료를 조사·수집하여 한국사 연구의 기초자료를 축적하고, 근·현대시기의 자료를 축적하여 지역사 연구역량을 강화하며, 1860년대부터 1970년대의 광범위한 근·현대사 편찬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하에 체계적인 수집을 위해 2004년부터 2005년까지 1년간 선행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조사된 일반 연혁의 내용을 DB화하여 『근·현대 지역사 자료 기초조사 총람』(8도편) CD-ROM(2005)과 『근·현대 지역사자료 기초조사 총람』(전국편) CD-ROM(2006)으로 발간하였다(국사편찬위원회 2008).

2006년에는 전국 3,566개 읍면동 지역에 대

한 근·현대기록물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동시에 전근대기록물까지 포함시키고 기존의 지역별인 경기,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의 시군별 자료수집과 더불어 제주도의 근·현대 마을회의록, 충남의 근·현대 교육자료, 충북의 청원의 새마을운동 관련 자료, 경북의 향전 관련자료, 울산의 반계 이양오 송정 박종해 태화 최이락가 고서고문헌, 경남의 수리조합 관련자료, 인천시의 근대 상공업관련 자료 등의 주제별 자료조사도 병행하고 있다. 2007년에는 제주를 제외한 지역별 자료조사와 주제별은 강원도 수복지구 자료, 전북의 천주교회사관련자료, 경북의 양월문중 소장 전근대·근·현대자료, 경북의 오미동 풍산김씨 제과 전근대·근·현대자료를 대상으로 하였다. 2008년도는 지역별 11곳과 주제별 4개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들 자료의 수집은 2013년까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된다면 문서자료 약 120만 장, 자료집 및 해제집 약 60권을 목표로 하고 있다(국사편찬위원회 2008).

3.3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은 근·현대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기위하여 1997년에 현대사연구소 설립하였는데 그 설립취지는 세 가지 이었다. 첫째, 현대사 연구 업적과 성과들을 체계적으로 종합하고 미진한 연구를 촉진하여 한국현대사 연구의 중심축으로 위상과 역할을 수행하는 것, 둘째, 현대사 연구기관들과 연대하고 현대사연구자들 상호간의 정보교환과 학술 토론의 장을 제공하는 것, 셋째, 국내외에 산재되어 있는 현대사 관련자료들을 조사, 발굴, 수

집, 정리하여 관련 연구자들에게 공개하고 제공함으로써 현대사자료정보센터의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취지하에 1997년부터 1998년도에는 근·현대사 사료를 집중적으로 수집하였는데, 한국전쟁 중 미군이 북한에서 노획한 문서들을 비롯한 1차 사료들을 모아 한국현대사관련자료 집 87종 287책을 수집하였고, 도서로 출간되지 않은 것은 마이크로필름 형태로 수집하였다. 해방기(1945~50)에 발행된 100여종의 신문 중에서 실물 확인이 가능한 60종의 신문을 집대성한 한국 해방기 신문자료 마이크로필름 80롤, 한국내정관계 및 한미관계 미국무성 기록 70롤, 미소 공위 미측대표기록 23롤, 한국전쟁관련기록 16롤, 북한로동신문(1952~1990) 71롤, 중앙연감(1949~1963) 8롤,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미일측 한국관계자료 22롤, 농사일기 2롤 등 69종 291롤(문서분량 29만여장)을 수집 제작하여 정리하였다(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8).

위의 현대사 연구소는 1999년 3월 1일에 폐지되었고, 장서각내에 근·현대사자료팀이 설치되면서 현대사연구소의 자료조사실을 승계하였으며, 2007년 7월 5일에는 장서각내의 근·현대사자료팀도 폐지되었다. 현재는 연구처에서 근·현대자료 업무관리를 하고 있지만 국사편찬위원회와의 업무중복이 제기되어 근·현대사자료수집은 유명무실해졌다.

1997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수집된 근·현대사료의 총분량은 23건 11책 18,852매, 19롤, 288개이다. 이들 사료는 문서, 마이크로필름, 구술자료로 구분된다. 이들 기록물들은 단독으로 수집하거나 국사편찬위원회, 국학진흥사업, 중앙일보, 중국대련대학, 우즈베키스탄과학원

과 공동으로 수집된 것이 있으며, 2000년도 수집된 대한제국기 의병전쟁관계자료와 미국소재 해방 전후 한국관련자료는 출간되었다. 이들 사료군들은 대부분 해방기를 전후한 교민사,

독도관련, 이주, 위안부, 민주화 관련, 식민지배정책, 동학농민, 의병 등에 관한 것으로 매우 중요한 사료들이다. 이들 현황을 <표 3>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근·현대사사료수집 전체 현황

년 도	건 수	분 량	구 분	자료명	현 소장처	비 고
1997	8	1,258(매) 19(롤) 102(개)	문서	신한공사경성지부 관련자료	장서각 정기간행물실	단독수집
			문서	귀환관련자료	장서각 정기간행물실	단독수집
			문서	우즈베키스탄 교민사자료	장서각 정기간행물실	단독수집
			문서	독도관련자료	장서각 시청각실	국편공동수집
			MF	농사일기	장서각 시청각실	국학진흥사업 공동수집
			MF	NARA문서	장서각 시청각실	국편공동수집
			MF	재미한족연합위원회문서	장서각 시청각실	국편공동수집
			MF	러시아이주관계문서	장서각 시청각실	국편공동수집
구술	일제시기 강제로 끌려간 일본군 위안부 증언채록 등 10건	장서각 시청각실	단독수집			
1998	2	437(매)	문서	부산왕복	연구행정실	단독수집(미공개자료)
			구술	민주화관계자료 등 5건	장서각 시청각실	단독수집
1999	3	5,143(매) 186(개)	문서	식민지배정책관련자료	연구행정팀	단독수집
			문서	동학농민전쟁관련자료	장서각정기간행물실	출간(2000)
			구술	강성원 구술자료 등 30건	장서각 시청각실	중앙일보 공동수집
2000	3	9(책) 7,948(매)	문서	대한제국기의병전쟁관계자료	장서각 정기간행물실	출간(2000)
			문서	미국소재 해방전후 한국관련자료	장서각 정기간행물실	출간(2001)
			문서	미국소재 푸에블로호사건관련자료	장서각 정기간행물실	단독수집
2003	1	1,012(매)	문서	한국분단관련미국소재자료	연구행정과	단독수집
2004	4	2책,191매	문서	한국관련 '滿鐵'자료목록	연구행정과	중국대련대학교 공동수집
				동북아 고대사 연구논저 목록	연구행정과	중국대련대학교 공동수집
				재소한국인 노동부대 징집 실태 조사 자료	연구행정과	우즈베키스탄 과학원공동 수집
				한국관련 러시아 극동문서보관소 소장 자료	연구행정과	단독수집
2005	2	2,863(매)	문서	해방 직후 한국 소재 일본인 자산 관련자료 6.25전쟁기 미군 심리전 관련자료	연구행정과	단독수집
계	23	11(책) 18,852(매) 19(롤) 288(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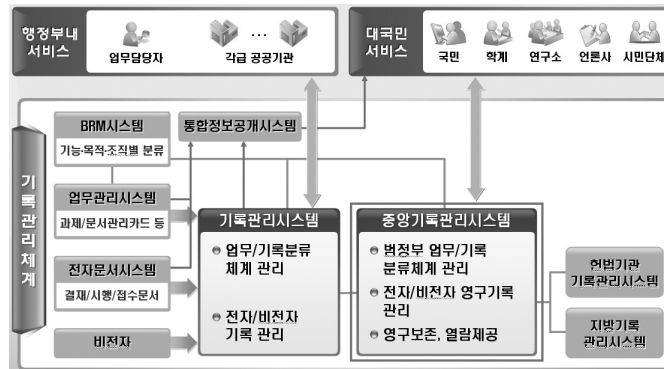
자료: <<http://www.aks.ac.kr>> 학술연구 / 연구사업 / 근·현대사료수집 / 자료수집 전체현황을 참조한 것임.

4. 근·현대 지역사료의 DB 구축 및 활용

4.1 국가기록원의 중앙기록관리시스템 및 나라기록포털시스템

국가기록원의 중앙기록관리시스템(Central Archives Management System: CAMS)은 범정부 전자기록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국가기록정보의 지식자원화를 달성하며, 고객만족 기록정보 서비스를 실현하려는 것이다.

각 부처에서 생산된 기록물은 각 부처 시스템에서 국제표준에 맞춰 저장·전송돼 전자적 방식의 인수·관리·보존·평가가 가능하며 주요 공공기록물의 기록·보존·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을 전자화해 디지털콘텐츠로 재탄생시켜 주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우선 중앙부처의 기록관리시스템과 연계하며 지방자치체의 행정기관에는 점차적으로 확장될 전망이다. 따라서 기록관리 전 과정 시스템 개념도와 중앙기록관리시스템의 개념도를 체계화하면 다음의 <그림 1>, <그림 2>와 같다.



(자료: 국가기록원 2007 중앙기록기록관리시스템 구축사업완료 보고회 PT자료 p.5)

<그림 1> 기록관리 전과정 시스템개념도



(자료: 국가기록원 2007 중앙기록기록관리시스템 구축사업완료 보고회 PT자료 p.6)

<그림 2> 중앙기록관리시스템

앞의 <그림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중앙기록관리시스템의 기능구성은 기획수집, 인수등록, 보존관리, 열람·활용, 콘텐츠관리, 기준관리 및 시스템운영관리로 이루어져 있다. 구체적인 업무 진행과정은 인수, 등록, 기획수집, 기록물정리, 보존포맷, 기술·재분류, 매체수록, 서고, 보존, 업무기록분류, 열람활용, 기준, 통계, 검색의 단계로 이루어진다.

첫째, 기획수집 및 인수등록단계를 보면, 기획수집단계에서는 주요 민간기록물 및 주요 민간·해외기록물을 수집하기 위해 기획수집분류체계를 지정하고, 소장처별 소장기록물 정보를 관리하며, 민간기록물의 실물수집을 위해 일정계획을 수립한다. 인수단계는 생산현황관리, 인수일정/이관목록확정, 기록물인수, 격리검사가 이루어진다. 그중 기록물의 인수에서는 기록관과 자료관으로 구분하여 이루어진다. 등록단계는 일반문서, 역사기록물, 행정박물 등 다양한 종류의 기록물의 등록이 가능하다. 기록물정리단계는 정리기술체계로 분류체계를 매핑하여 통합하고, 기관, 기록물군, 계열, 하위 계열 등에 대한 집합기술을 작성하며 등록된 정리기술분류를 조회한 후 기록분류체계와 기술을 매핑한다.

둘째, 보존관리단계를 보면, 입고 전에는 전자기록의 영구보존포맷을 변화하고, 전자서명의 장기검증체계를 도입하며, 비전자기록의 보존처리주기를 관리한다. 보존상자를 편성하고, 소독 및 서고관리가 이루어진다. 입고 후에는 디지털화, 기술·평가, 공개/재분류, 점검·보존관리가 이루어진다.

셋째, 열람활용단계에서는 기록의 열람활용을 위해 나라기록포털시스템에서 온라인열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정분야별, 주제유형별, 조직/기능별, 컬렉션/토픽별로 검색이 가능하다. 특히 컬렉션검색은 이용요청이 많거나 사회적 관심이 높은 기록물을 대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조선총독부기록물, 독립운동관련관결문, 국무회의관련컬렉션, 지적관련컬렉션, 관보컬렉션, 대통령컬렉션, 일제강제연행자명부, 반민주행위자조사심사, 일제시기학교건축도면, 내고향역사알기, 서양고지도를 통해 본 한국컬렉션 등을 선정하여 서비스하고 있다(<http://www.archives.go.kr><기록물검색>나라기록포털).

국가기록원은 또한 '나라기록통합검색서비스'를 2008년 6월부터 8월까지 시범운영하고 있는데, 행정안전부, 해양경찰청, 문화재청, 건설교통부의 준현용기록물과 전문관리기관인 국가기록원의 소장기록물을 연계하여 서비스하고 이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넷째, 콘텐츠관리단계에서는 기본콘텐츠관리, 주요컬렉션관리, 콘텐츠간 연계관리가 이루어진다.

다섯째, 기준관리단계에서는 업무 및 기록분류표관리, 기준정보관리, 기록분류관리가 이루어진다.

여섯째, 시스템운영관리에서는 사용자관리, 접근권한, 감사추적, 운영관리가 이루어진다.

4.2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데이터베이스시스템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서 수집된 근·현대사 자료의 일부가 서비스되고 있다.

우선 한국데이터베이스시스템은 국편이 편찬 간행하거나, 소장하고 있는 자료 등 한국사 관련 주요자료를 전산화하여 서비스 하고 있는 원문 데이터베이스이다. 이 데이터베이스에는 한국사기초원전자료 DB, 국사편찬위원회 편찬 간행된 자료 DB, 한국근·현대인물자료와 같이 다종의 자료를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여 일관되게 서비스하는 가공 DB, 외부기관의 자료 DB 등 40여종의 자료군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000년부터는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구축사업이 진행되어 2004년부터는 한국사데이터베이스와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의 국사편찬위원회 자체 DB를 통합하여 “한국사데이터베이스”라는 이름으로 통합서비스하고 있다. 2007년에는 국사편찬위원회 HOI(History Object Identifier) 체계가 확립되어 한국사데이터베이스의 URL <<http://db.history.go.kr>>이 분리되었다.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은 역사관련 전문기관이 전문센터로서 참여하여 구축한 역사자료 DB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전산화하여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에 전문센터로서 참여하는 기관은 국사편찬위원회를 비롯하여 경상대학교 문천각, 국가보훈처,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 독립기념관,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 명지대학교 국제한국학연구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부산시민도서관,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성균관대학교 존경각, 전북대학교 박물관, 전쟁기념관,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국학진흥원, 한국여성개발원, 한국학중앙연구원 등이다.

이 시스템은 서로 상이한 시스템간의 데이터를 연동하여 이용자 입장에서는 기관이 구축한 각 데이터베이스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승정원일기의 경우 국편의 텍스트 DB, 규장각의 이지지 DB, 민족문화추진회의 번역 DB가 독자적으로 구축되어 있지만 이용자입장에서는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에 들어가면, 승정원일기의 텍스트, 이미지, 번역문을 동시에 이용할 수가 있다.

한국사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서는 근대사와 현대사에 관한 자료를 검색할 수 있다. 근대사는 고종시대사, 동학농민혁명 자료총서, 동학농민혁명 연구논저, 동학농민혁명 일지, 각사등록 근대편, 주한일본공사관기록, 통감부문서, 한국 근대사자료집성, 중추원조사자료, 근대 한일외교자료, 한국근대지지자료, 한국근대지도자료, 일제침략하한국36년사, 한국독립운동사자료,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국내외항일운동문서, 직원록자료, 사진유리필름자료, 동학농민혁명 사일지 등의 서지정보, 원문, 국역 등의 내용을 검색할 수 있다. 현대사는 반미특위조사기록, 친일파관련기록, 이승만서한철, 미군정기군정단·군정중대문서, 휴전회담회의록, 유엔의 한국문제처리에 관한 미국무부의 문서, 유엔한국임시위원단관계문서, 한국근현대잡지자료, 한국근현대회사조합자료, 한국근현대인물자료, 한국근현대신문자료, 자료대한민국사, 해외사료총서 등의 서지정보, 원문, 목차 등의 내용을 검색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국편의 근·현대 자료들은 가치 있는 것만을 선별하여 한국사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일부만 구축되어 있으므로 통합·이용하기가 어렵고 DB 구축이 되지 않은 자료들은

더욱 이용하기가 어렵다.

국편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2008년 5월에 전자사료관 시스템 구축사업을 시작하였다. 이 사업은 국편의 수집 자료의 관리 및 대국민 서비스를 전자화하여 업무의 효율과 서비스의 고도화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국사편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history.go.kr/>) 메뉴상의 '전자도서관'을 구성하고 있는 '소장자료검색, 해외수집자료, MF목록/원문서비스'라는 3개의 시스템을 통합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이 진척되면 그간에 이루어진 여러 국편의 한국사 데이터베이스의 원문 및 이미지 자료와 연계되고,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의 목록 정보 제공 및 최종 페이지에 연결된다. 또한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시소러스에 연계되고 사료관리 시스템의 일관 공정이 고도화된(국사편찬위원회 2008).

4.3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시스템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시스템은 전국 232개의 시·군·구 지역의 다양한 지역문화자료를 발굴·수집·연구하여 체계적으로 집대성하고, 이를 디지털화하여 인터넷으로 서비스하는 지식정보시스템이다. 이의 편찬 목적은 지역문화 관련 인적자원을 교육하고 조직하여 전국의 지역문화자료를 총체적으로 발굴·분석하여 디지털콘텐츠로 제작하는 것이다. 그리고 시·군·구별 '디지털향토문화대전'을 통합·구축하여 지역문화에 대한 총체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지식기반사회의 토대를 마련하고 정부의 지역문화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

여하려는 것이다(한국학중앙연구원 2008).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시스템 구축 사업은 2003년부터 2004년까지 '디지털성남문화대전'의 시범사업을 실시하였고, 본 사업의 1단계는 2004-2013년까지 60개 지역이며, 2단계는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50개 지역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진척된 사업내용을 보면 2004-2005년에 '디지털성남문화대전'(<http://seongnam.grandculture.net>)과 '디지털청주문화대전'(<http://cheongju.grandculture.net>)을 편찬·완료하였고, 2006-2007년에는 '디지털진도문화대전'(<http://jindo.grandculture.net>), '디지털진주문화대전'(<http://jinju.grandculture.net>)이 완료되었으며, 2007-2008년에는 '디지털제주시문화대전'(<http://jeju.grandculture.net>), '디지털남원문화대전'(<http://namwon.grandculture.net>)이 완료되었다. 2007년 현재 남원시, 제주시, 울릉군, 구미시, 음성군, 용인시, 북제주군, 공주시, 울진군, 여수시, 충주시, 양산시, 창원시, 평안북도 향산군, 부천시, 논산시, 칠곡군 등 17개 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총 22개).

이러한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시스템의 사업내용은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다(한국학중앙연구원 2008).

첫째, 지역문화 지식자원아카이브 구축은 지역문화와 관련된 각종 지식자원을 조사·수집하여 이를 DB로 구축하는 것이다.

둘째, 지역문화연구자연찬은 지방소재 문화단체, 향토사 연구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문화담당관 등 본 사업관계자들의 전문적인 지식과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계획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

셋째, 후보지역선행조사연구는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편찬 후보지역에 대한 사업수행을 위해 기초 자원 조사 및 정보화 전략 연구를 수행하는 것으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총 21개 지역의 선행조사연구가 시행되었다.

넷째, 지역별 문화대전 콘텐츠 제작은 시·군·구 단위 지역별로 지역문화 콘텐츠의 조사·발굴 및 연구분석작업을 수행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콘텐츠 내용체계를 구성하려는 것이다. 지역문화의 지식정보는 대분류를 9개영역으로 나누고 중분류는 28개 분야로 나누어 항목을 선정·발굴하고 연구·집필하며 관련 멀티미디어 자료를 수집하고 제작한다. 9개의 주제는 삶의 터전(자연·지리), 삶의 내력(역사), 삶의 자취(문화유산), 삶의 주제(성씨와 인물), 삶의 틀(정치·경제·사회), 삶의 내용 1(종교), 삶의 내용 2(문화와 교육), 삶의 방식(생활과 민속), 삶의 이야기(언어와 문학)이다.

(정치·경제·사회), 삶의 내용 1(종교), 삶의 내용 2(문화와 교육), 삶의 방식(생활과 민속), 삶의 이야기(언어와 문학)이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디지털성남문화대전’의 성남향토문화대백과의 대분류와 중분류의 화면을 <그림 3>과 <그림 4>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다섯째, 시스템 개발 및 운영은 구축된 자료를 토대로 지역문화 포털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한다. 다양한 디렉토리 서비스 및 검색서비스를 제공하고 일반연구자 및 학술연구자에 이르는 광범위한 이용자의 정보수요를 만족시킨다.

이 사업의 편찬이 갖는 의의는 첫째, 지역문화자료의 체계적인 발굴을 통해 한국문화 연구력 수준을 제고하고 디지털 시·군지 편찬의



<그림 3> '디지털성남문화대전'의 성남향토문화대백과의 대분류



〈그림 4〉 '디지털성남문화대전'의 성남향토문화대백과의 증분류

연구기반을 확충한다. 둘째, 21세기 시·군지의 표준 프레임워크를 제시함으로써 종래 시군지 편찬 사업의 증분성과 비효율성 해소를 통해 공공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셋째, 지역의 문화적인 특수성과 관련된 고급지식정보를 적시에 제공하여 지역특화산업발달에 기여한다. 넷째, 문화콘텐츠상품개발의 중간재역할을 한다. 다섯째, 인문지식과 정보기술을 아우르는 학제적 전문인력을 배양하려는 데 있다(한국학중앙연구원 2008).

따라서 이 한국향토문화대전시스템은 자원의 디지털화와 공유에 있어서 분류체계, 콘텐츠 개발, 지역연계시스템이 체계화된 DB라고 할 수 있다.

5. 근·현대 지역사료의 공동 활용을 위한 협력과제

국가기록원, 국사편찬위원회, 한국학중앙연구원 등이 근·현대 지역사료의 공동 활용을 할 수 있는 몇 가지 협력과제를 제시해보고자 한다.

첫째, 세 기관 사이에 근·현대 지역사 자료의 공동 활용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해야 한다. 이 협의회가 구성되면, 각 기관의 자료의 중복 수집의 방지, DB 시스템 구축 및 공동 활용 등의 몇 가지 사안들을 협의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점차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세 기관간의 공동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기존의 위원회를 활용하거나 새로운 협의회를 구성

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다. 기존의 위원회를 활용하는 방안은 '사료수집보존수집협의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 위원회는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2008.3.21 개정) 제15조에 의거하여 교육과학기술부 산하에 '사료수집보존수집협의회'를 둘 수 있고, 이 법률의 시행령(2008.2.29 개정)에 근거하여 국사편찬위원회의 위원장이 협의회 의장이 되고, 구성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상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 이 협의회에는 국사편찬위원회, 국가기록원, 국가보훈처,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군사편찬연구소, 법원도서관,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외교통상부 외교사료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의 11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이 협의회는 각 기관의 국내외 사료수집 현황과 계획에 대한 협의를 하는 것이 주요 업무인데, 해외의 사료 수집의 중복구축의 방지에 비중을 두어 일을 진행한다. 이 협의회 기능을 강화하여 국내외 사료 수집의 중복 구축을 방지하고 공동 활용을 위한 여러 가지 대안들을 제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새로운 협의회를 구성하는 방안은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2007.4.27 개정)의 제15조에 근거하여 '국가기록물관리위원회'의 산하에 전문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국가기록물관리위원회 산하에 '근·현대 지역사료 협의회'를 두고 근·현대 기록의 수집의 활성화, 사료의 중복 수집의 방지, DB 구축 및 공동 활용에 대한 방

안을 강구하여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 국가기록원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행정기관의 기록을 이관 받아 관리하는 국가기관이고, 현재 기록의 소장량은 다른 기관의 소장량보다 훨씬 많다. 이는 국립중앙도서관의 납본제도와 마찬가지로 기록의 수집에 있어서는 법적 강제력을 가지고 기록을 수집 관리 할 수 있는 기관이다. 따라서 공공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정리하고 DB 구축하며 공동 활용을 하는 것은 국가기록원의 가장 중요한 핵심 업무의 하나이다. 이 업무에 있어서는 국가기록원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각 기관과 연대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안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셋째, 근·현대 사료의 디지털화된 자원의 공유를 위한 기술개발, 콘텐츠의 이용과 개선, 공공의 이용과 참여, 국제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려면 국가기록원, 국사편찬위원회, 한국학중앙연구원의 분담된 역할이 있어야 한다.

국가기록원은 공공기록물의 디지털화 사업과 관련된 계획의 수립과 사업의 발주, 표준화, 기관 간의 연계, 저작권보존, 협력문제 등의 총체적인 전략을 제시해 나가야 한다. 이어 국사편찬위원회, 한국학중앙연구원을 협력기관으로 하고 각 지방 및 해외는 거점이 될 수 있는 근·현대 사료를 소장하고 있는 기관들을 연계해 나가야 한다. 국가기록원이 운영하고 있는 나라기록포털시스템은 국가지식포털과 양해각서(MOU : Memorandum of Understanding)¹⁾

1) 일반적으로 기존 협정에서 합의된 내용의 뜻을 명확하게 하거나 기존 협정의 후속조치와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는 절차이다. 본래 국가 간에 문서 형태로 된 합의를 의미하며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를 체결하여 이용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지만 시스템의 분류, 디렉토리 검색, 콘텐츠의 강화 등 여러 가지 보안조치가 필요하다.

국사편찬위원회는 역사기록물을 가장 많이 소장하고 있는 기관이며 DB 구축과 기관간의 자원공유에 있어서는 주도적인 역할을 해온 기관이다. 국편이 주도하는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은 역사관련 전문기관이 전문센터로서 참여하여 구축한 역사자료 DB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전산화하여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 시스템에 전문센터로서 참여하는 기관은 국사편찬위원회를 비롯하여 18개 기관이다. 이 시스템은 '디렉토리서비스'에 통합디렉토리서비스와 편년자료서비스로 세분하여 통합서비스를 하고 있다(강순애 2007). 따라서 국편이 주도하는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의 통합디렉토리 검색시스템 및 서비스방안의 기술을 공유해야 한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은 근·현대사의 자료수집기능은 취약하지만, 디지털 시군지인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시스템은 자원의 디지털화와 공유에 있어서 분류체계, 콘텐츠 개발, 지역연계시스템이 체계화된 DB이다. 따라서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시스템의 분류체계, 콘텐츠 개발, 지역연계시스템의 기술을 공유해야 한다.

이들 세 기관간이 근·현대사 사료의 중복수집을 방지하고 DB구축과 공동 활용에 있어서 구체적인 업무간의 협력을 할 수 있는 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국가기록원이 중심기관이 되고 국사편찬위원회와 한국학중앙연구원이 협력하게 되면, 지방 및 해외

기관의 정보교류 및 국제적인 협력은 매우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나갈 것으로 여겨진다.

6. 결 론

국가기록원, 국사편찬위원회, 한국학중앙연구원을 중심으로 하여 근·현대 지역사료 수집, DB 구축 및 공동 활용에 대해 살펴본 바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1) 한국의 지방사의 개념은 향토사, 지방사, 지역사 등으로 사용되면서 혼용은 되고 있지만 연구 분야에서는 지역사 또는 지방사로 사용되고 있고, 교육 분야와 문화콘텐츠를 다루는 분야에서는 향토사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최근에 이 세 용어들 중에서 근·현대사와 관련해서는 지역사의 개념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2) 지역사료를 수집하는 많은 기관 중 공공기록물을 수집하는 대표기관은 국가기록원이고 역사기록물을 수집하는 대표기관은 국사편찬위원회와 한국학중앙연구원이다.

첫째, 국가기록원은 373개의 중앙행정기관 기록물군 3,217개의 계열정보를 포함하여 문서 1,080,000여권과 기록물 550,000여점, 간행물 277,000여권, 총독부문서 30,700여권, 해외기록물문서 370,000여매, MF 3,774롤, 지도 419매의, 도면 526,300여매, 고문서(날장과 책형) 591매와 116책에 대한 기록물군과 컬렉션 기술서로 이루어져 있다. 지역사료는 514개의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대학, 기타공공기관 기록물군에 대한 8,454개의 계열정보를 포함하여 문

것이다. 최근에는 그 범위와 뜻이 넓어져 정부간, 국가 기관간, 일반 기관간, 일반 기업간에 상호 제휴와 협력 등을 위해 맺는 다양한 형태의 문서로 된 합의사항을 MOU로 표현한다.

서 297,562권, 카드 229,142권, 도면 484권, 시청각기록물 9,501권에 대한 기록물군 기술서로 이루어져 있다. 국가기록원이 소장하고 있는 일반문서류 중 중앙행정기관이 문서와 도면의 양은 많지만, 카드는 지방행정기관과 지방교육청이 중앙행정기관에 비해 양이 훨씬 많다. 시·도교육청은 도면자료를 소장하고 있지 않다. 카드는 지방행정기관과 지방교육청이 중앙행정기관에 비해 양이 훨씬 많은데, 이는 경상남도, 대전광역시,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이관된 것이 많은 것으로 제시되어 있다.

둘째, 국사편찬위원회는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각 지역에 산재해 있는 근·현대기록물을 본격적으로 수집하고 있는데, 이는 1860년대부터 1970년대의 광범위한 근·현대사 편찬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2006년부터는 전국 3,566개 읍면동 지역에 대한 근·현대기록물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동시에 전근대기록물까지 포함시키고, 기존의 지역별인 경기,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의 시군별 자료수집과 더불어 주제별 자료조사도 병행하고 있다. 이들 자료의 수집은 2013년까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면 문서자료 약 120만장, 자료집 및 해제집 약 60권을 목표로 하고 있다.

셋째, 한국학중앙연구원은 1997년에 현대사연구소를 설치하고 1997년부터 1998년도에는 근·현대사 자료를 집중적으로 수집하였다. 이 연구소는 1999년 3월 1일에 폐지되었고, 장서각내에 근·현대사자료팀이 설치되면서 현대사연구소의 자료조사실을 승계하였으며, 2007년 7월 5일에는 장서각내의 근·현대사자료팀도 폐지되었다. 현재는 연구처에서 근·현대사

료 업무관리를 하고 있지만 국사편찬위원회와의 업무중복이 제기되어 근·현대사자료수집은 유명무실해졌다. 1997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수집된 근·현대사료의 총분량은 23건 11책 18,852매, 19롤, 288개이다. 이들 사료는 문서, 마이크로필름, 구술자료로 구분된다. 이들 사료군들은 대부분 해방기를 전후한 교민사, 독도 관련, 이주, 위안부, 민주화 관련, 식민지배정책, 동학농민, 의병 등에 관한 것으로 매우 중요한 사료들이다.

3) 근·현대 지역사료의 DB 구축 및 활용에 대해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기록원의 중앙기록관리시스템(Central Archives Management System: CAMS)은 범정부 전자기록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국가기록정보의 지식자원화를 달성하며, 고객만족 기록정보 서비스를 실현하려는 것이다. 기록의 열람활용을 위해 나라기록포털시스템에서 온라인열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정분야별, 주제유형별, 조직/기능별, 컬렉션/토픽별로 검색이 가능하다. 특히 컬렉션검색은 이용요청이 많거나 사회적 관심이 높은 기록물을 대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조선총독부기록물, 독립운동관련판결문, 국무회의관련컬렉션, 지적관련컬렉션, 관보컬렉션, 대통령컬렉션, 일제강제연행자명부, 반민주행위자조사심사, 일제시기학교건축도면, 내고향역사알기, 서양고지도를 통해 본 한국컬렉션 등을 선정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둘째,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서 수집된 근·현대사 자료의 일부가 서비스되고 있다. 한국데이터베이스시스템은 국편이 편찬 간행하거나, 소장하고 있는 자

료 등 한국사 관련 주요자료를 전산화하여 서비스 하고 있는 원문 데이터베이스이다. 2004년부터는 한국사데이터베이스와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의 국사편찬위원회 자체 DB를 통합하여 “한국사데이터베이스”라는 이름으로 통합 서비스하고 있다. 한국사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서는 근대사와 현대사에 관한 자료를 검색할 수 있다. 국편의 근·현대 자료들은 가치 있는 것만을 선별하여 한국사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일부만 구축되어 있으므로 통합·이용하기가 어렵고, DB 구축이 되지 않은 자료들은 더욱 이용하기가 어렵다. 국편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2008년 5월에 전자자료관 시스템 구축사업을 시작하여 국편의 수집 자료의 관리 및 대국민 서비스를 전자화하여 업무의 효율과 서비스의 고도화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셋째,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시스템은 전국 232개의 시·군·구 지역의 다양한 지역문화자료를 발굴·수집·연구하여 체계적으로 집대성하고, 이를 디지털화하여 인터넷으로 서비스하는 지식정보시스템이다. 본 사업의 1단계는 2004-2013년까지 60개 지역이며, 2단계는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50개 지역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진척된 것은 ‘디지털성남문화대전’(<<http://seongnam.grandculture.net>>), ‘디지털청주문화대전’(<<http://cheongju.grandculture.net>>), ‘디지털진도문화대전’(<<http://jindo.grandculture.net>>), ‘디지털진주문화대전’(<<http://jinju.grandculture.net>>), ‘디지털제주시문화대전’(<<http://jeju.grandculture.net>>), ‘디지털남원문화대전’(<<http://namwon.grandculture.net>>)이 완료되었다.

2007년부터 남원시, 제주시, 울릉군, 구미시, 음성군, 용인시, 북제주군, 공주시, 울진군, 여주시, 충주시, 양산시, 창원시, 평안북도 향산군, 부천시, 논산시, 칠곡군 등 17개 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4) 근·현대 지역 사료의 DB를 구축하고 이들 데이터베이스의 자료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몇 가지 방안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 기관 사이에 근·현대 지역사 자료의 공동 활용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해야 한다. 이에 기존의 위원회를 활용하거나 새로운 협의회를 구성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다. 기존의 위원회를 활용하는 방안은 ‘자료수집보존수집협의회’를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새로운 협의회를 구성하는 방안은 국가기록물관리위원회 산하에 ‘근·현대 지역사료 협의회’를 두고 근·현대 기록의 수집의 활성화 사료의 중복 수집의 방지, DB 구축 및 공동 활용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여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 국가기록원의 가장 중요한 핵심 업무는 공공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정리하고 DB 구축하여 공동 활용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기록원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각 기관과 연대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진다.

셋째, 근·현대 사료의 디지털화된 자원의 공유를 위한 기술개발, 콘텐츠의 이용과 개선, 공공의 이용과 참여, 국제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려면 국가기록원, 국사편찬위원회, 한국학중앙연구원의 분담된 역할이 있어야 한다. 국가기록원은 공공기록물의 디지털화 사업과 관련된 계획의 수립과 사업의 발주, 표준화, 기

관 간의 연계, 저작권보존, 협력문제 등의 총체적인 전략을 제시해 나가야 한다. 국사편찬위원회는 역사기록물을 가장 많이 소장하고 있는 기관이며 DB 구축과 기관간의 자원공유에 있어서는 주도적인 역할을 해온 기관이다. 국편이 주도하는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의 통합 디렉토리 검색시스템 및 서비스방안의 기술을 공유해야 한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은 근·현대사의 자료수집기능은 취약하지만, 디지털 시군 지인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시스템은 자원의

디지털화와 공유에 있어서 분류체계, 콘텐츠 개발, 지역연계시스템의 기술을 공유해야 한다.

이들 세 기관간이 근·현대사 사료의 중복 수집을 방지하고 DB구축과 공동 활용에 있어서 구체적인 업무간의 협력을 할 수 있는 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국가기록원이 중심기관이 되고 국사편찬위원회와 한국학중앙연구원이 협력하게 되면, 지방 및 해외 기관의 정보교류 및 국제적인 협력은 매우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나갈 것으로 여겨진다.

참 고 문 헌

- 강순애. 2007. “한국 민간 소장 고문헌의 DB 구축과 공동활용 방안.” 『서지학연구』, 38: 5-46.
- 강순애. 2006. “한국의 지방사 디지털아카이브의 구축과 통합 및 이용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 34: 5-35.
- 고석규. 1998. “지방사연구의 새로운 모색.” 『지방사연구 어떻게 할 것인가: 제1회역사문화학술대회』, 역사문화학회: 13-40.
- 국가기록원. 2008. 『국가기록물 소장기록물 가이드 I』. 대전: 국가기록원.
- 국가기록원. 2008. 『국가기록물 소장기록물 가이드 II』. 대전: 국가기록원.
- 국가기록원. 2007. 『중앙기록기록관리시스템 구축사업완료 보고회』. 대전: 국가기록원.
- 국사편찬위원회. 2008.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사료관 시스템 구축사업 제안서』. 성남: 국사편찬위원회.
- 국사편찬위원회. 2008. 『2008년도 지역사 사료 수집 지원사업업무편람』. 성남: 국사편찬위원회.
- 국사편찬위원회. 2005. 『국사편찬위원회 요람』. 성남: 국사편찬위원회.
- 김미향. 2004. “지방역사기록물 수집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韓國外國語大學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金炫榮. 2000. “방법으로서의 지방사: 조선시기 ‘사족지배체재론’을 중심으로.” 『韓國地方史 研究의 現況과 課題』. 韓國史研究會. 서울: 景仁文化社.
- 박찬승. 2008. “근·현대 지역사 자료의 연구 이용 현황 및 기획 수집 방향 연구.” 『2008년도 지역사 사료 수집 지원사업업무편람』. 국사편찬위원회 편, 37-56.
- 양정필. 2007. “근·현대 지역사 연구의 현황과 전망.” 『역사문제연구』, 제 17호: 9-35.

- 이해준, 2001. “한국 지역사 연구의 이론과 체계 시론,” 『한국사론 32: 지역사 연구의 이론과 실제』. (국사편찬위원회 편).
- 정지연, 2007. “근·현대기록물 수집활동 체계화 방안: 국사편찬위원회를 중심으로.” 『강원인문대논총』, 18: 91-121.
- 지수걸, 2001. “한국 근·현대 지역사 서술체계와 활용자료.” 『한국사론 32: 지역사 연구의 이론과 실제』. 국사편찬위원회 편, 313-336.
- 최희진, 2005. “지방역사기록물 수집정책 연구.” 韓南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한국기록관리학회, 2008. 『기록관리론: 증거와 기억의 과학』. 서울: 아세아문화사.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년사 편찬위원회, 1998.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년사』.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한국정신문화연구원·전국문화원연합회, 2001.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편찬 기초조사 연구』.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한국학중앙연구원, 2008. 『문헌자료의 이해와 활용』.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참고 사이트〉

- 국가기록원. <<http://www.archives.go.kr>>.
- 국사편찬위원회. <<http://www.history.go.kr>>.
- 한국학중앙연구원. <<http://www.aks.go.kr>>.